

어느덧 봄기운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제 곧 나무에는 푸른 새순이 돋을 것이고 꽃들도 피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봄날, 아름다운 장기기증 서약을 함께 하며 봄을 맞이하는 가족들도 있다.

지난해 어느 날, 한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 위해 기증본부를 찾았다. 어머니는 서약을 마쳤지만, 함께 온 학생은 그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미성년자인 경우 장기기증 서약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 뿐만 아니라 동의한 보호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즉

우리도 생명나눔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탁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어렵게 발걸음을 한 학생에게 한없이 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부모님이 동행해서 동의를 했지만 서류가 없다고 등록이 안된다니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정책인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와 더불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술이나 담배, 음란시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실제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님 동의 없이 서약을 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족 동의 없이 장기기증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관련기관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본인 의사만 표현해 주면 된다.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등록을 한다든지 본인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든지 등의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기기증 등록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을 제외한 전 국민을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하거나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를 물어 표시하는 나라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 형태로 구성하고 있어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의 나라들은 국민의 20~30% 이상이 장기기증 희망자이며, 뇌사 시 장기기증률도 인구 100만 명 당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뇌사 시 장기기증률이 100만 명당 5명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장기기증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동이다. 장기기증 활성화는 유명한 몇 사람의 모범적인 실천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인 제도와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한, 생명나눔 강국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따뜻한 봄을 맞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인 장기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KEA